



Global Goings-on

개발도상국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문제점 (What Microloans Miss)

1.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소액융자를 대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발달하였음.

- UN은 2005년을 "세계 소액 신용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Microcredit)"로 지정하여 소액창업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액 금융의 창시자인 Muhammad Yunus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음.

- 소액금융에 대한 기관 및 개인의 투자액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증가해서 44억 달러에 이르렀음.

2. 그러나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한 국가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음. 이것은 소액융자가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운용되는 방식 자체의 문제임.

-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대부분 다른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1인 기업 형태임. 이것은 빈곤해결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만이 한 국가의 빈곤을 감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임.

3. 따라서 가난한 국가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증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임

-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 창출의 60% 이상을 차지함.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이 부재한 실정임.

-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소액 금융을 통한 것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용을 통한 안정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임.

(링크: http://www.newyorker.com/talk/financial/2008/03/17/080317ta_talk_surowiecki?printable=true)

미 국

클로닝으로부터 얻은 식품의 안전성 발표 (Food from cloning is safe, says US agency)

1.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복제된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발표함.

- FDA는 복제된 소, 돼지, 염소로부터 얻은 육류 및 우유가 식품으로서 안전하다고 밝힘.
- FDA의 발표는 며칠 전 유럽의 한 식품안전감시단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클로닝으로 얻은 식품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2. 하지만 이와 같은 FDA의 발표는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음.

- 소비자 단체 및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은 클로닝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며 FDA의 발표를 반박하였음.
- 복제된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돌리를 비롯한 많은 복제 동물들이 성장 초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임.

3. 미국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된 식물로부터 얻은 식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이지만, 많은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복제된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을 먹는다는 사실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링크: <http://www.ft.com/cms/s/0/c8ba0928-c3d6-11dc-b083-0000779fd2ac.html>)

유전자 검사의 문제점 (Fear of insurance trouble leads many to shun or hide DNA tests)

1. DNA검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 DNA 검사로 개인의 유전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적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에는 DNA 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테스트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음.

- 그들은 의료기록 상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남을 경우 이로 인해서 의료보험에 들거나 구직 과정 시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두려워 함.
- 어떤 환자는 유전정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를 우려해 본인 부담으로 DNA 검사를 하기도 함.

3. 실제로 의료보험 가입 시나 직장을 구할 때 이러한 유전자 정보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혀졌으나, 미국과 같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유전자 정보를 숨기려는 경향이 큼.

- 예를 들어, 헌팅턴병 위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DNA 검사를 받은 비율은 미국은 5%에 불과한 반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캐나다에서는 2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음.

(링크: <http://www.iht.com/bin/printfriendly.php?id=10330888>)

인종 간 건강 불평등 (Toward A Policy-Relevant Analysis Of Geographic And Racial/Ethnic Disparities In Child Health)

1. "War on Poverty"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간 미국의 인종 간 건강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음. 이러한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큼.

2. 인종 간 건강 불평등을 가져온 사회적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인종별 거주 지역의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및 그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임.

3. 인종 간 지역분리가 건강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첫째, 지역분리는 소수인종의 교육 및 고용 기회 등을 제한하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막음.
- 둘째, 지역분리는 범죄, 환경오염 물질 등 불건강한 환경에의 노출을 증가시킴.
- 셋째, 지역분리는 소수인종 거주 지역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의 설립을 막음.

4. 따라서 인종 간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집중된 정책들 뿐만이 아니라 주거이동성(housing mobility)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 간 분리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링크: <http://content.healthaffairs.org/cgi/content/abstract/27/2/321>)

세계보건기구

금연 보고서

(W.H.O. and Bloomberg Open Global Antismoking Project)

1.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21세기에 전세계에서 최대 10억 명의 인구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음. 이것은 선진국에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후진국과 중진국에서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음.
2.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재단으로부터 2백만 달러의 후원을 받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전세계의 흡연자 수, 담배에 대한 세금을, 금연운동의 성공 정도 등을 종합한 최초의 결과물임.
3. 이 보고서는 금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아동들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링크: <http://www.nytimes.com/2008/02/08/health/policy/08smoking.html?ref=policy&pagewanted=print>)

ewanted=print)

항생제 내성 결핵 확산 (Drug-Resistant TB at Record Levels)

1.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새롭게 감염된 결핵 환자 9백만 명 중 항생제 내성 결핵균을 가진 사람은 약 500,000명에 이르고 있음.
2. 특히, 구소련 지역의 다제내성결핵 발병률은 측정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앞으로 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음.
3.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의 항생제 내성 결핵은 전체 결핵 발병의 22.3%를 차지해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한편 몰도바는 19.4%,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는 16%, 러시아의 톰스크주는 15%를 기록하였음.
4.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결핵균의 확산에는 해당국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힘.
 - 이들 정부는 결핵균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연구시설 투자에 미흡했고 항생제 수량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환자의 항생제 복용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지 못

했다고 지적.

(링크: http://www.nytimes.com/2008/02/26/health/26cnd-tb.html?_r=2&hp=&oref=slogin&pagewanted=print)

스웨덴

남성의 폭력에 대한 대책 강구 (Action plan for combating men's violence against women, violence and oppression in the name of honour and violence in same-sex relationships)

1.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여기서도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임.
2.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남성의 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러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된 전략이 부재한 상태임.
 - 3. 남성의 폭력에 대한 대책은 사법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관련 및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4. 스웨덴 정부에서 2월 22일 간행된 보고서는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6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첫째, 남성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늘려야 함.
 - 둘째, 폭력 예방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함.
 - 셋째, 폭력에 대한 사법제도의 기준 및 효율성을 재정비해야 함.
 - 넷째, 폭력 가해자의 상습성을 막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여러 공공기관 및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협력이 필요함.
 - 여섯째, 폭력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함.
- (링크: <http://www.sweden.gov.se/sb/d/574/a/98769>)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Putting a Plague in Perspective)

- 1.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에이즈 퇴치에 집중되어 있음.
- 부시 정부는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인 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를 통해 지금까지 14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의약품 제공하였고, 향후 5년 동안 3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에 있음.
-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부시 정부의 300억 달러 유치계획도 부족하다며 에이즈 퇴치를 위해 최소한 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

2. 이러한 추세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다른 여러 공중보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함.

- 2007년 미국은 30억 달러를 에이즈 프로그램에 투자하였지만, 공중보건의 기본이 되는 정수 프로젝트(safe-water project)에는 3천 만 달러만을 투자하였음.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설사병을 야기할 수 있음.

- 아프리카의 수백만의 아동 및 성인이 영양실조, 폐렴 등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해서 사망함. 영양이나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유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높아짐.

3.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지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함.

- 개발도상국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및 상황을 막지 못해서 매년 천만 명의 아동과 50만 명의 산모가 죽고 있는 가운데 에이즈 퇴치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릴지 아니면 정수 프로젝트 등 기본적인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릴지 결정해야 함.

(링크: http://www.nytimes.com/2008/01/01/opinion/01halperin.html?_r=1&sq=pepfar&oref=slogin&scp=2&pagewanted=all)

영국

복지개혁의 필요성 (Too sick for work?)

1. 지난 10년간 영국의 실업자 수가 반으로 줄

어늘었고, 공중보건도 향상되었지만, 젊은 세대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음.

- 이 기간 동안 35세 미만 노동가능 연령층 중 50만 명 이상이 노동무능력수당(incapacity benefit)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청구인원보다 많은 숫자임.

2. 이러한 추세는 이들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근로유인이 부족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노동무능력수당의 혜택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후하고, 자격 심사 기준이 간단하기 때문임.

3.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정부는 2008년 10월, 노동무능력수당 지급의 자격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보조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선보일 예정임. 이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

(링크: <http://www.ft.com/cms/s/0/41bac584->

[bc83-11dc-bcf9-0000779fd2ac.html?nclick_check=1](http://www.ft.com/cms/s/0/bc83-11dc-bcf9-0000779fd2ac.html?nclick_check=1))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Paying Patients Test British Health Care System)

1. 60년 동안 영국 복지제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Service)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원칙이 시험을 받고 있음.

2. 복잡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3. 정부는 환자가 한번 치료를 받을 때 일부의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개인부담하고, 나머지는 N.H.S가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이것이 자칫 의료서비스의 빈부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서 N.H.S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규정에 의하면 N.H.S가 비용을 부담하는 치료를 받을 때에는 N.H.S에서 정한 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음. 만약 다른 약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치료비용

을 개인이 부담해서라도 별도의 진료를 받아야 함.

4. 그러나 N.H.S. 연합 (N.H.S. Confederation) 정책국장 Nigel Edwards 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비용 전부를 환자가 부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기본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음.

(링크: http://www.nytimes.com/2008/02/21/world/europe/21britain.html?_r=2&hp=&page_wanted=print)

중 국

1자녀 정책 고수 (China one-child rule 'to remain')

1. 중국은 도시 거주 가구당 1자녀, 농촌 거주 가구당 2자녀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 중국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 (State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의 Zhang Weiqing은 산아제한정책을 변경하면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중국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2. 이것은 산아제한정책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Zhao Baige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 차관의 발언 이후 일주일만의 정부 관계자의 입장 표명임.

- Zhao Baige 차관은 산아제한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3.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산아제한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지금까지 산아제한정책을 변경하려는 노력이 때때로 있었지만, 인구의 급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바 있음.

(링크: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281023.stm>) 